

서울시, 생산도시로... '팹시티 프로젝트' 본격 가동

실험공방 '팹랩' 확충·전문인력 육성
2054년까지 자급자족률 50% 목표
'국제 팹시티 그랜드 서밋' 유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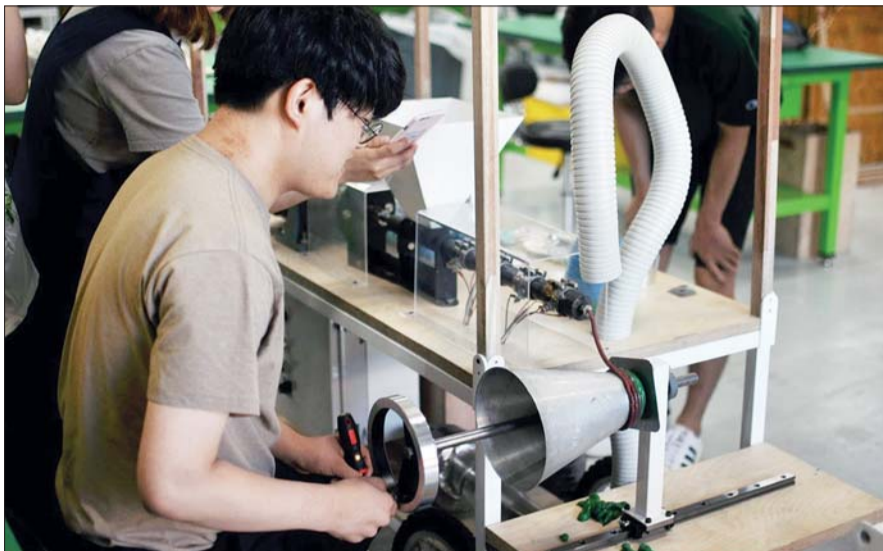
서울시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팹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차세대 실험공방인 팹랩 시설을 확충하고, 메이커 시설을 이끌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팹시티 추진단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5월 6~11일에는 서울혁신파크에서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팹시티 서울 추진 계획'을 내놨다.

팹시티(Fab City, Fabrication City)는 자원을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체 생산력을 갖춘 도시로 혁신을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오는 2054년까지 농업·에너지·제조업 분야에서 도시의 자급자족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보스턴, 중국 선전, 칠레 산티



팹시티 프로젝트 활동(플라스틱 조각들을 넣고 누르면 화분이 나오는 데스크 팩토리). /서울시

아고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팹시티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 국내 최초로 팹시티에 가입했다.

팹시티 서울 추진 계획은 ▲인프라(공간·인력·네트워크) 확대 ▲시민 제작 역량 강화 및 관심 제고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팹시티 서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팹랩 시설을 확대한다. 팹랩은 3D 프린터,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등 실험 생산 장비를 갖춘 곳으로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방된 제작 실험실을 뜻한다. 현재 서울

혁신센터 내에 서울이노베이션팹랩이 495㎡ 규모로 조성돼 있다.

우선 시는 팹랩에 준하는 메이커 시설을 팹랩으로 전환한다. 시제품제작소, 스마트팩토리 등 9개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진단을 실시해 팹랩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캠퍼스타운과 리빙랩에는 혁신공간이나 팹랩을 설치한다. 올 하반기 문을 여는 세종대·중앙대 청년가온누리에 팹랩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시설 확보 시 팹랩 설치를 검토한다. 공간과 함께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디지털대장간, 상상공작소 등 메이커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이노베이션팹랩을 통해 팹아카데미 화상 교육과 일대일 프로젝트,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시는 팹랩과 연계한 팹시티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환경, 건축, 업사이클링, IoT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기술혁신가,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실험 과제를 발굴하고, 팹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팹랩과 메이커 시설에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기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실험을 위한 기술·정보 지원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시는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혁신파크에서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일본, 중국, 호주 등 7개국 15개 도시에서 공무원, 제작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국제 팹시티 그랜드 서밋' 유치를 추진한다. 국제 팹시티 그랜드 서밋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팹

시티 행사로 지난해 파리에 이어 202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팹시티 프로젝트의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팹시티 서울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서울혁신기획관이 총괄하고 경제정책실, 도시정책실, 기후환경본부 등이 함께한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팹시티의 철학과 가치를 확산·반영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거버넌스 구축·운영,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제정책실은 스마트팩토리, 시제품제작소 등의 팹랩 등록을 지원한다. 또 기존 산업거점에 팹랩과 소상공인의 연계를 추진하고 캠퍼스타운과 리빙랩에 지역여건에 맞는 팹랩을 조성한다. 도시재생실은 세운상가, 용산 등 재생 대상지에 들어선 팹랩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기후환경본부는 재활용플라자를 주축으로 자원순환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킨다.

시는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팹시티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제작을 통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한강공원 '규격봉투 실명제'로 쓰레기와 전쟁 선포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 본격화
체계적 청소가이드라인 등 마련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인 한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한강공원의 쓰레기 발생량은 연 12% 이상씩 증가했다.

이에 시는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우선 시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에 입주한 매점, 캠핑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때 '청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청소 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한강공원의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이 즐기는 인기 있는 휴식 방법이지만,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하고 녹지 훼손,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됐다.

시는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하고 텐트를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도록 한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 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내용을 안내·계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삼각산시민청, 방문객수 5.8만명 돌파

28일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서울시가 동북권 시민을 위해 우이신설도시철도 솔밭공원역 상부에 조성한 '삼각산시민청'이 오는 28일 개관 1주년을 맞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총 5만8252명이 삼각산시민청을 방문했다. 시는 삼각산시민청이 동북권의 대표적인 시민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공연, 체험, 전시, 교육, 모임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54회 운영해 시민 2만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2.4%의 만족도를 보였다.

시는 개관 1주년을 맞아 25~28일 삼각산시민청에서 기념행사를 가진다. 1주년 기념 행사는 ▲시민 합창, 오케스



트라·팝페라 축하공연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삼각산 시민청 개관 1주년 기념식' ▲ 지역예술

가·작가 초청행사인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지역연계 특별프로그램' ▲지역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주민 대상 토론회, '찾아오는 삼각산 시민청 특별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각산시민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삼각산시민청 운영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학부모가 직접 급식재료 점검"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는 '학부모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시내로 공급되는 학교 급식재료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학교급식재료 산지에 직접 방문해 식재료 공급부터 유통경로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초·중·고 학부모다. 현재 총 319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첫 점검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

평군 등지에 있는 농산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서울시 내 초·중·고 881곳으로 보내진다.

모니터링단은 친환경 실과, 양파, 호박 등의 전처리 과정, 작업자 위생관리, 시설 청결상태, 식재료 포장상태, 포장지 표시 사항, 친환경 인증서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생산지 방문을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될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되는 안전한 토비, 해충 구제 방법 등을 직접 확인한



학부모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활동 모습. /서울시

다. 생산 작물 수확에도 함께 참여한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급식재료 산지를 찾아가 점검할 '서울시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8기를 모집한다. /김현정 기자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사업, 8개 건물 선정

건축자산 보전·마을 명소화 추진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붉은벽돌 마을' 사업과 관련해 8개 건물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붉은벽돌 마을 사업은 붉은색 하면 성수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시와 성동구는 지난 3년간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등을 지원했다.

성수동은 1970~80년대에는 경공업 시대 때 붉은벽돌로 지어진 공장과 창고가, 1990년대에는 붉은벽돌로 된 소규모 주택이 들어서면서 붉은벽돌로 된 건물이 즐비한 지역이 됐다. 현재 사업대상지 면적 7만1220㎡의 건물 248동 중 약 68%(169동)가 붉은벽돌로 지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8개 건물 중 6개는 붉은벽돌로 신축된다. 2개 건물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총 3개는 준공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